

“지방자치 30년, 이제 실질적 분권으로”

김관영 도지사,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맞아
“전북, 지방자치 실질적 주체로 성장해 나갈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30년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형식적 자치를 넘어 실질적 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제도적 성과가 축적됐고,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권 교체와 12.3 내란

시도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대응력이 국가 위기관리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며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 국가 운영의 주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128만민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 주도형 행정체계를 통한 실질적 분권형 지방정부로의 재탄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지난 30년간 지방정부는 성숙했고, 스스로 지역을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할 역량을 갖췄다”며 “이제는 중앙이 더 잘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방을 믿고 권한을 넘기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며 지속가능한



분권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 선사에서 ‘균형 없이는 성장도 없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라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공약은 지방 주도의 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며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7대 3에 머물러 있고, 지방교부세 비율은 20년 넘게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세수 추계 오류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국이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에 더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재정권은 지방정책 실행의 핵심이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보조금 중심 구조를 넘어 지방세 확충과 교부세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균형발전이 실현돼야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야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광역·기초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

윤수봉 의원,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사법개혁 추진 촉구
나인권 의원 발의 장수 어르신 부양 지원 건의안도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도의회는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완주1)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수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제도 개혁, 대법관 증원, 독립 검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

도 도입, 판결문 완전 공개 등 실질적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의회는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부양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수 어르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을 ‘로맨스스캠’ 피해액 1000억원대

작년보다 325억원 늘어... 검거율은 50%도 안돼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해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SNS 대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허위 가상화폐 투자를 종용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사례가 많아 경찰청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로맨스스캠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고, 올해도 46.9%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은 “초국경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도 큰 다중피해 사기로 대부분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국제공조와 병합수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도민의 정의’에 부합해야” | 혁신당 도당 대변인단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구상이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 대변인단은 27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과연 도민의 정의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북도의 준비 부족과 불투명한 행정이 오히려 도민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당초 9월 완료 예정이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단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은, 애초부터 완성도 높은 계획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핵심 기반시설로 꼽히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점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했다.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국제 접근성 확보가 어려워지면 올림픽 유치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단은 27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과 관련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 연장 등 비판
“새만금 신공항 건설 법원 판결 인한 좌초 위기도 우려 요인
도교 등과 같은 전철 받지 않기 위해 현실적 준비 등 중요”

분석이다. 대변인단은 또 “올림픽 유치가 정

의롭다는 이름을 가지려면 막대한 예산이 일부 특권층의 이익이 아니

라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환경 훼손과 예산 낭비 논란은 정의로운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의 불투명한 소통과 타당성 조사 지연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마저 훼손한다”며 “도민과의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지역발전이 아니라 행정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 여러 도시들이 올림픽 이후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04년 아테네는 막대한 부채로 국가경제가 흔들렸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는 경기 침체를 맞았다. 2020년 도쿄는 코로나19로 무관중 대회를 치르며 7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전북도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현실적 준비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변인단은 “정의로운 올림픽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도민이 납득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며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가 그 이름처럼 도민의 정의에 부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축! 전주매일 창간

입업정보제공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개정 안내

산림경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시행일 2025년 8월 22일(일부개정)

산림경영계획 작성 간소화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 작성 방법 간소화 (내용)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정보 및 숲가꾸기 사업 정보 활용(다드림 등) 가능
행정용어 정비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용어 정비 등 (당초) 임명, 수고, 경급, 축적 등 (변경) 임명(숲의나이), 수고(나무높이), 경급(나무지름기), 축적(나무의 부피함) 등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방법 개선

* 산림 소유자가 직접 작성할 경우

내용	현행	개선
표준지* 조사 *산림조사, 측정 등의 기준이 되는 지역	현장조사	임업정보 다드림(임원),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정보 활용
표준지 경계	표시	생략 가능
입목축적* * 나무 부피의 합	기재	숲가꾸기 단계에서는 생략 가능
경영계획도	지형도 (1/5000 또는 1/6000)	항공사진, 지형도(축척 미포함) 등